

#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2. 10. 26.

행 정 재 무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 장 영 교

## 1. 제안요지

- 가. 의안번호: 제1817호
- 나. 제 출 자: 박성근 의원
- 다. 제출일자: 2022. 9. 6.
- 라. 회부일자: 2022. 9. 28.

## 2. 제안이유

성동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·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구성원 간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에서 제2조)
- 나. 신고의 접수 (안 제4조)
- 다. 신고의 처리 (안 제5조)
- 라. 실태조사 실시 (안 제7조)

마. 갑질 예방 교육 실시 (안 제8조)

바. 신고자 보호 (안 제12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협조부서: 감사담당관

다. 예산조치: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·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

라. 입법예고: 2022. 9. 예정

#### 5. 검토의견

가. 제안 취지

- 본 조례안은 성동구 공무원 등의 갑질<sup>1)</sup> 행위에 대한 신고·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구성원 간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
- 우리 사회의 갑질 관행은 심각한 수준으로 그동안 공판병에 대한 갑질, 공공기관 채용비리, 성희롱 등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·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하였으며
- 민간분야에서도 일부 재벌 오너 갑질, 간호사 ‘태움’<sup>2)</sup> 문화,

---

1) 갑질: 사회·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,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

중소기업 기술탈취, 본사의 가맹·대리점에 대한 강매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이 지속되어

- 갑질 관행이 공공·민간 영역 구분 없이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으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이 고조됨
- 이에,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하여 사회·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갑질에 대한 근절 의지를 표명하고 이후,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공분야가 우리 사회 갑질 근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음

“채용비리,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.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입니다.” (‘18. 1. 10, 신년사)

“국민 눈높이에 맞게 새로운 정책과 제도, 인식과 행동의 기준을 만들어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는 것이 적폐 청산이고 반부패 개혁입니다. 우선 공공부문이 갑질 근절의 모범을 보이기를 바랍니다” (‘18. 4. 18,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)

- 이후, 「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」 (2018. 7. 5.)에 따라 「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」 (2019. 2.)을 배포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 부문별·기관별 특성에 맞는 갑질 근절대책의 수립·시행토록 함

---

2) 태움: ‘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’는 뜻에서 나온 말로,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

### 【종합대책, 가이드라인 중 지자체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들】

- 기관별 자체 점검 정비를 통한 법령·조례·지침 정비(자체 가이드라인 마련)
- 연 1회 기관별 갑질근절 대책 수립·시행
- 기관별 '갑질 피해 신고·지원센터' 설치·운영, 2차 피해 모니터링
- 감사·감찰 부서 내에 갑질 전담 직원 지정·운영
- 기관별 익명 상담·제보 사이트 운영
- 반기별로 기관 차원에서 갑질 실태조사 실시
- 갑질 신고 종결 시 신고자 피해자·만족도 조사
- 갑질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

[출처] (2022.5.1. 직장갑질119)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대책 평가 보고서 13쪽

#### 나. 주요 제정내용

- 안 제1조(목적)에서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였고
-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“공무원 등”, “직무관련공무원”, “갑질 행위”, “갑질 행위자”, “피해자”, “신고자”에 대해 정의하였으며
- 안 제4조(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)와 제5조(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)에서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성동구 갑질 피해 신고·지원 센터를 설치·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
- 신고·지원센터는 △ 구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, △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, △ 사무처리, 교육훈련, 홍보, 지원정책 연구 △ 관계기관과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함
- 안 제6조(중복 접수의 처리)에서는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릴 것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7조(실태조사 실시)와 제8조(갑질 예방 교육 실시)에서는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 실시와 전문강사 초빙, 사이버 강의 등을 통한 갑질 예방 교육 실시에 대해 명시함
- 안 제9조(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)에서는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를 명시하였으며
  -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 제5조(징계의 감경)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
 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5조의3(직위해제)에서 임용권자가 파면·해임·강등·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

- 안 제10조(신고자 비밀보장)에서 제12조(신고자 보호)에서는 신고자가 갑질 행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분보장 등을 규정함
  -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
 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4조(신고자의 비밀보장)와 제64조의2(신변보호조치)에 관련 근거가 있음
- 안 제14조(협조자의 보호)에서는 신고자 외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보호할 것임을 명시하였으며
 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5조(협조자 보호)에 관련 근거가 있음
- 안 제15조(허위신고)에서는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배제하고자 함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제정안은 갑질 피해 신고·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, 실태조사,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

- 아울러, 갑질 행위 근절대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태 조사가 명목상으로만 운영되지 않고 숨어있는 갑질 행위를 발견하고 제도 홍보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
-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갑질 사례를 적극 수집·전파하여 갑질 행위 근절과 예방 분위기 형성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고,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상호 존중하는 사회조성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